

장·차관 인사 발표 늦추고 靑 정무라인 풀가동 야당 설득전

위장전입에 막힌 총리 인준... 첫 시험대 오른 文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위장전입이 후보자는 배우자)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보름여 만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관을 풀기 위한 묘수를 찾아야 할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주말과 휴일인 27~28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 경내에 머물며 첫 난관을 돌파할 방안을 모색했다.

과거 위장전입만으로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위장전입은 비교적 경미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편이나, 문제는 위장전입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인 '5대 배제 사유'에 속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병역 회피·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배제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공약집에도 이를 명시했다.

이에 야권은 "당선되고 나서 말이 달라지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는 일단 자세를 낮추고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입중성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 눈높이

주말·휴일 공식일정 없이

난관 돌파할 묘수 찾기

野 대통령 직접 사과 요구

전병헌 수석 등 물밑 접촉

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국회에도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야권은 비서실장의 사과로는 부족하다며 문 대통령의 입을 통해 직접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전면적인 대야(對野) 설득전을 벌이는 한편, 조각 인선에 속도조절을 나섰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주말에 이어 휴일인 오늘도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야당 측 지도부와 원내대표단 등을 상대로 계속 설득하고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은 이날 중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등과 주로 전화 접촉을 갖고 총리 인준문제와 관련한 협조

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석은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2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참석, 총리 인준문제와 관련한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총리 인준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강조해 야권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가 미디어오늘의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67.1%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의혹이 총리 임명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애초 이날 중 차관급 인사와 일부 장관급 인사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야당에 대한 설득 상황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늦췄다.

이 후보자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 정리지 않은 상황에서 장·차관 인사를 발표할 경우 문 대통령이 "마이웨이"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야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물밑에서 야당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사를 발표하면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오히려 야당을 자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동의동 금감원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5·18 판결' 논란

“군 판사로 시민군 등 가혹한 판결”...2012년 청문회서도 지적
5·18기념재단 “사실관계 파악후 입장...사실이면 해명 필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민중항쟁 당시 군사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사형과 유기징역형 선고 등 가혹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37년 전 군판사로서 5·18을 억눌렀던 인물이 헌법을 수호하고 재판하는 헌법기관 수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5·18 가혹 판결 논란과 관련해 "5·18 당시 독립된 위치에서 양심에 의한 판결을 내릴 상황이 아니었다. (제게도) 큰 상처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위원 자유한국당 광삼도 의원에 따르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지난 1979년 12월 육군 31사단 군감찰관으로 임관했고 5개월 후인 5·18 당시 군판사 자

격으로 재판에 임했다.

군판사로서 당시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에게 사형 선고를 했고, 진압군에 의해 대검에 찢려 숨진 민간인의 자상 흔적을 검시를 통해 확인하고도 '군인이 광주시민들을 난자했다'고 주장한 시민에게 실형 선고를 내렸다는 게 광의원 측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또 전두환 퇴진을 요구한 시민군 측에 가담한 여고생에게는 징역 1년형, 군의 실상 행위를 알린 진도군의 한 이장에게는 유언비어 유포죄를 물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광의원 측은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삼청교육대에서 도주한 광주항쟁 당사자들을 처벌하고 군생활 동안 3차례나 상훈을 받는 등 군부독재 정권의 방침에 성실하게 조력했다는 게 광의원 측 주장이다.

실제 광주일보가 입수한 지난 1980년 10월 24일자 전교사계엄보통 군법회의 판결문을 보면, 김 후보자는 법무사(군판사·

중위) 자격으로 영관급 심판관 2명과 함께 내란죄로 기소된 광주시민 임보(당시 24세)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군사법원은 임씨가 다른 시민들과 함께 북구 신안동 대한동무 무기고에서 총기를 '탈취'하고 계엄군 최후 거점인 도청을 점거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고, 이듬해 3월 판결은 확정됐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민주화 시위에 가담했던 광주시민 김보(당시 28세)씨에게도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서구 백운동에 주소를 두고 고물행상을 하던 김씨는 시민들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한 5·18 연구자는 "김 후보자 말대로 당시 독립된 판결을 내릴 위치가 아니었지만, 5·18 당시 민주화를 요구한 시민들에게 징역형 등 가혹한 판결을 내린 것이 한 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도 "김 후보자의 5·18 관련 재판 내용이 충격적이다.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5월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놓겠다"면서 "알려진 판결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김 후보자 본인의 명확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인준 열쇠 쥐는 국민의당 “고민되네”

호남민심 의식 입장 어정쩡

靑입장 발표후 분위기 강경

국민의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다. 과거의 여야 대결구도를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캐스팅보트로서의 존재감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남 민심이 상당히 우호적이어서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일단 문재인 정부에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잘못에는 따끔하게 목소리를 낸다는 대응 기조를 설정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좋은 역할을 한다면 양자 협력하고, 잘못된 역할을 한다면 가차 없이 때서운 질책을 서슴지 않겠다"며

'협력과 견제'의 투트랙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런 기조에서 당 지도부는 호남 출신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 검증은 날카롭게 하되 인준안 처리에는 대체로 협조하려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이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한 청와대 입중성 비서실장의 입장 발표 이후 당 내 분위기가 강경해졌다.

이낙연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대통령 공약은 그냥 선거 캠페인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후보자는 5대 배제기준에서 4개가 위반되는데 그냥 넘어갈 명분이 안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말 사이 총리 인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는 한 29일 국민의당 의총에서 인준 동의로 당론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여전히 인준을 거부하는 힘들 것 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으로서 호남 민심을 거스르기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이 심상찮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호남에서 민주당은 71%를 기록했지만 국민의당은 5%로 곤두박질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인준해야 한다"며 "5대 배제 관련 인물들 대응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깨져가는 작금의 현실을 대통령께서 직접 해결하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당 안팎의 현실을 감안해 국민의당은 남은 청문회와 6월 임시국회에서 사안별로 대화와 견제를 적절히 병행하면서 묘수 찾기에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2017. 06. 09 (금) - 11(일) KINTEX 제 1전시장

온라인 박람회 : 5/22~6/11

KINTEX현장 박람회 : 6/9~6/11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충장점

☎문의 062)228-1199

협찬 SM면세점 kakao xxio KEB하나은행 LOTTECARD BCCard KB국민카드